

일본의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 실시와 전망*

김 병 료

금년 6월말부터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
과 관련된 찬반 논
란에 대해 살펴보
았다.

일본의 동경(東京) 곡물상품거래소와 관서(關西) 상품거래소에서 금년 8월 8일부
터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이 시작되었다. 일본에서 쌀 선물거래를 2차 세계대전으
로 경제통제가 실시되던 1939년에 폐지된 이후 72년 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정치
와 언론에서 최근까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금년 6월 동경과 관서의 양 상품거래
소에서 선물거래 시험상장을 농림수산성에 신청하여 7월 1일 인가되어 시험상장
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2년간 시험상장을 거쳐 쌀 선물거래시장이 활성화되
고 실적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면 본 상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금년 6월말부터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과 관련된 찬반 논란을 정리
해 보고자 한다. 논란이 점화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일본농업신문 기사와 기고,
사설을 참고하였으며, 일본판 주간 이코노미스트(9.27일자)에 이슈주제로 다루어진
전문가들의 글 등을 종합하여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1. 일본의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 신청과 인가 과정

일본에서 쌀 선물
거래가 재개된 것
은 1939년 이래로
72년만이다.

일본에서 쌀 선물거래가 재개된 것은 1939년 이래로 72년만이다. 쌀 선물시장이
란 미리 정해 놓은 가격으로 미래 특정시점에 쌀을 판매하는 거래방식이다. 쌀 선
물시장의 기원은 에도(江戸)시대(1603~1867년)의 오사카(大阪) 도지마고메카이쇼

* 본 내용은 일본의 경도대학교 대학원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는 김현진이 번역한 일본의 주간 이코
노미스트(9.27일자)와 일본농업신문의 여러 관련 기사들을 참고하여 김병률 선임연구위원이 작성
하였다(brkim@keri.re.kr, 02-3299-4137, hyun-jin17@hanmail.net).

(堂島米會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지마고메카이쇼는 세계 최초의 선물시장이다. 미국의 시카고선물거래소도 이 구조를 참고로 하여 개장하였다.

1700년대 중반 오사카의 도지마고메카이쇼에서 시작한 쌀 선물시장은 그 후 약 200년간 지속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통제가 강화되면서 1939년 폐지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쌀 등 식량의 생산유통을 국가가 관리하는 식량관리제도(食糧制度)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쌀 선물시장은 폐지된 상태가 지속되었다.

동경과 관서의 곡물 선물거래소는 2005년에도 쌀 시험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 당시 자민당정권 하에 있던 농림수산성에 의해 각하된 바 있다. 당시 농림수산성에서 시험상장 신청을 각하한 이유는 쌀 생산조정의 참가를 유도하고 있는 현 생산조정정책과의 정합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즉, 선물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생산조정제 하에 있는 농가들이 쌀 생산조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쌀 생산조정을 지키지 않은 농가들이 증산한 쌀을 선물시장에 팔아서 고수익을 얻게 된다면, 쌀 생산조정에 참가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이 이루어진 것은 금년 6월에 양 곡물 선물거래소에서 농림수산성에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을 신청하고(관보 공지가 6월 25일 종료) 농림수산성에서 마침내 7월 1일 인가해 주었기 때문이다.

7월 1일 농림수산성에서 전격적으로 인가하기 전 1주일만 일본의 민주당과 자민당, 농림수산성과 일본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인 JA그룹, 학자들 간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시기였다. 쌀 선물거래 신청에서 농림수산성에서 인가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당초 일본의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은 양 거래소에서 농림수산성에 신청하고 관보(官報) 공지가 6월 25일에 종료되고, 농림수산성에서는 7월 25일까지 약 한달 동안 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JA는 산지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며 불인가를 요청해 왔으며, 농림수산성은 6월 22일 JA의 불인가 요청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고 인가할 방침을 시사하였다.

여당인 민주당이 6월 23일 “당내 논의를 거칠 시간이 필요하다. 불인가라는 입장에 서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가노 농림수산성 장관은 6월 24일 내각회의 후에 마련된 회견에서 쌀 선물 시험상장인가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림수산성과 야당인 자민당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았다. 24일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 장관에 쌀 선물 시험상장 반대를 제외한 자민당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농림부회 최고고문은 회담 후에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 인가 여부는 농림수산성과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결론지어진 것으로 국민적 합의와 국회 논

농림수산성이 전격적으로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을 인가하기 전 1주일만 민주당과 자민당, 농림수산성과 JA그룹, 학자들 간의 찬반 양론이 맞선 시기였다.

의가 없는 논의라고 반발하였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성은 국회에서 쌀 선물 시험 상장에 관하여 집중심의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기로 하고, 민주당도 농림수산성의 이 같은 자세에 대해 위기감을 나타내었다.

농림수산성은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을 6월 28일에 인가할 방침이었으나, 6월 27일 판단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민주당이 당 의논을 고려한 대응을 요구한 데 이어, 이바라기(枳木)현이 불인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다만 시험상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일본정부가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성은 불인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바꾸지 않았다. 이로 인해 농림수산성은 당과의 조정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성은 식량·농업·농촌정책심의회 식량부회를 6월 30일에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식량부회에서 쌀 선물 시험상장 인가에 대한 검토상황을 보고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6월 30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성장관은 7월 1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 인가를 전격 발표하였다. 호별소득보상제도 도입으로 인해 생산조정이 선택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불인가 조건인 ‘생산·유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이에 쌀 시험상장에 반대해 온 JA그룹은 쌀 선물거래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데 이어 항의문을 발표하고 야당도 일제히 비판하였다.

농림수산성장관은 7월 1일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 인가를 발표하였다.

2. 쌀 선물거래에 대한 찬반 쟁점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 신청 이후 집권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 학자들 사이에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농민대표조직인 일본의 농업협동조합 JA그룹에서 반대 의견을 앞세워 쌀 선물거래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항의가 있었지만 결국 농림수산성은 시험상장을 인가하였다.

JA그룹과 자민당은 쌀 선물거래 재개에 대한 반대 이유로 (1) 생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과의 정합성, (2) 호별소득보상제도를 기반으로 한 현행 쌀 정책과의 모순, (3) 쌀 유통실태와 동떨어진 거래, (4) 국제식량가격 상승과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쌀 시세의 급격한 변동 초래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최대의 초점은 쌀 생산조정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이다.

일본의 농림수산성과 민주당 정권은 2008년 쌀 생산조정정책이 변경되어 ‘호별소득보상제도(戸別所得補償制度)’를 도입함으로써 쌀 정책 기조가 “가격정책에서 소득정책으로” 대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인가 결정을 했던 2005년도 상황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쌀 선물거래를 반대하는 JA그룹과 자민당은 현재의 정책적 상황이 여전히

JA그룹과 자민당의 쌀 선물거래 재개에 대한 반대 이유의 최대 초점은 쌀 생산조정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이다.

생산을 조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2005년도 상황과 변함이 없다는 의견이다. 즉 쌀 전작장려정책으로 생산조정을 하는 것과 쌀 교부금을 지급하여 수급을 조정하는 것은 “교부금의 지급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견해이다. 환언하면 정책수단이 바뀐 것일 뿐 ‘식량법’(주요 식량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통칭)에 근거하여 생산조정을 유도한다는 근본 정책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호별소득보상제도는 쌀 판매가격이 생산원가를 밑도는 경우 그 차액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의 참가자에게는 생산수량의 목표달성을 요구하여 생산조정을 유도한다.

생산조정은 쌀 생산수량목표에 맞추어 생산하는 농업종사자에 대해 0.1ha당 15,000엔을 교부하는 선택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선물거래가 시행되어도 쌀 생산과 유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생산조정제도의 변경은 기존에 실시하던 생산조정제도가 전국의 농가에 일률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반강제 제도였으나 2008년부터는 쌀 재배농가들이 생산조정에 참가할 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선택제로 바뀌었다.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 호별소득보상제도는 농가의 소득감소, 쌀 과잉문제 해소, 논·밭농업 활성화, 자급률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10년 모델사업을 거쳐 2011년 전면 도입
- 호별소득보상제도의 특징은 ‘쌀’을 감산하는 동시에 ‘전략작물’을 증산하여 자급률을 향상한다는 점임. 전략작물은 수요가 늘어나고 일본 국내에서 증산이 가능한 작물로서 ① 맥류, 대두, 사료작물, ② 신규수요미(사료용쌀, 가루용쌀, 연료용쌀, 청벼, 가공용쌀), ③ 메밀, 유채, ④ 사탕무 등
- 호별소득보상제도는 다음 세가지 직불제로 구성
 - ① 쌀 소득보상직불제 : 논 대상,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적자경영을 하는 쌀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생산비 적자분을 ‘고정지불’로 보전한 후, 당년도 판매가격이 표준판매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변동지불’로 보전하는 ‘부족불제도’임.
 - ② 논활용 소득보상직불제 : 논 대상, 쌀의 수급조정을 위해 과잉된 쌀 대신에 전략작물(쌀 대체작물)의 증산 도모
 - 전략작물은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상회, 국민식생활에 특히 중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타작물과 조합 가능한 작물의 증산을 위해 주식용 쌀과 소득균형 수준으로 작물별 단가 책정
 - 대상품목: 맥류, 대두, 사료작물, 가루용쌀, 사료용쌀, 청벼, 메밀, 유채, 가공용쌀, 지역특산물

쌀 선물거래 재개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선물거래로 농민들의 쌀 가격변동리스크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③ 발작물 소득보상직불제 : 논·밭 대상, 발작물 중 전략작물을 대상으로 경영안정과 자급률 향상 도모

- 주식용 쌀과 소득균형 유지 수준으로 단가 설정, 증산 장려를 위해 수량단위 단가를 지불하는 ‘수량지불’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단수 이하 농가에 대해 전년 생산면적을 기준으로 지불하는 ‘면적지불’ 병행

- 면적지불 단가는 발작물 공통으로 10a당 20,000엔, 수량지불 단가는 품목별로 평균지불단가를 기준으로 품질에 따라 차등 설정하여 고품질 유도

- 대상농가는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대상작물을 생산하는 판매농가 전체와 마을영농 등으로 광범위하게 설정

- 보전수준은 만성적인 적자품목에 대해 ‘생산비를 보전’하는 일종의 ‘부족불제도’로서, 전국 ‘일률적인 단가’로 지불

쌀 선물거래 재개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선물거래로 농민들의 쌀 가격변동리스크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동경 곡물상품거래소와 관서 상품거래소는 농민들에게 쌀 가격변동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인 가격 헤지(hedge)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쌀 선물시장은 생산자에게 가격변동의 위험성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이러한 논거의 사례로서 주간 이코노미스트 9.27일자 필자인 지토 노부유키(茅野信行) 교수는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쌀 현물가격의 하락에 대한 헤지(hedge) 기능에도 주목할 것이다. 헤지(hedge)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농가가 모내기를 하기 전인 4월에 쌀 현물 320건을 1건(60kg) 당 15,000엔, 즉 총 480만 엔으로 매도계약을 한다. 그러나 그 해는 기후가 좋아 풍작을 이루어 60kg당 12,000엔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다. 선물을 이용하면 480만 엔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용하지 않았다면 384만 엔의 이익으로 그치게 된다. 한편, 흉작으로 인해 가격이 올라 60kg당 15,000엔 이상이 되면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은 줄지만, 당초 예정한 금액은 확보할 수 있다. 선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구조이다.”

수확량 전부를 선물시장에서 거래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수확량의 5분의 1인 500건을 선물시장에서 거래하여 최저한의 이익을 확정시켜 놓는다. 그리고 수확기에 현물가격이 오르면 남은 물량을 팔면 된다. 대규모 농가가 헤지(hedge) 기능을 사용하기 적합하다.

2차 대전이후 최악의 흉작이었던 1993년 일본은 시장에 아시아 수입쌀이 유통되었지만 소비자들은 자국산 쌀을 찾았다. 그러나 쌀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박사의 협조로 정리되었다.

산 쌀 가격은 전혀 변동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심히 쌀을 생산하여 평년 수준이나 그 이상을 수확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대한 보상이 돌아가야 했다. 선물시장이 있었다면 1993년산 가격은 상승했을 것이고 많이 수확한 농가는 고생의 대가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JA는 이에 대해 선물거래로 가격 헤지가 가능하다면, 생산수량목표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호별보상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호별보상에 따른 소득 헤지가 있는 가운데, 선물거래에 따른 가격 헤지 구조를 이중으로 실시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논거로 내놓은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일본농업신문, 8.9일자 ‘선물거래의 과제, 하)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쌀 가격변동보충 교부금과 제도적인 모순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생산자가 4월에 선물거래를 하여 10월 판매예정인 쌀을 팔아 60kg당 14,000엔에 거래가 성립될 경우,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쌀 가격변동보충 교부금의 표준적 판매가격(보충기준)도 14,000엔이 된다. 10월에 현물가격이 60kg당 13,000엔이 될 경우, 농가는 쌀 가격변동보충 교부금으로 선물가격인 14,000엔과 보충기준과의 차액인 약 1,000엔을 받는다. 반대로 현물가격이 60킬로 당 1만 5,000엔으로 오를 경우, 농가는 약속한 1만 4,000엔에 팔아 현물거래보다 1,000엔 적게 받게 된다. 더욱이 현물가격이 보충기준을 웃돌았기 때문에 보충교부금은 나오지 않는다.”

쌀 선물거래 재개에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의 가격변동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쌀 선물거래로 인한 쌀에 대한 투기 가능성과 가격불안정성 문제이다.

동경 곡물상품거래소는 선물거래가 가격변동리스크를 줄이는 보험적 성격을 띠는 기능과 상품 선물지표가격을 표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여, 쌀 선물거래 시 “작황에 따른 가격변동리스크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JA그룹을 비롯한 반대 입장에서는 일본 내 선물거래는 석유와 금 같은 공업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농산물 선물거래 대상으로는 팥, 옥수수 등이 있지만 시장규모는 작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쌀 선물거래에 대해 생산자의 불안감이 크고, 쌀 시세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이나 쌀 수급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특히 국민의 주식인 쌀이 투기대상이 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선물거래는 증거금을 맡기면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어 일본 선물시장에 투기 목적으로 참가하는 참가자가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나 집하·판매업자뿐 만 아니라 가격변동으로 이익을 보려는 투자가들에 의해 가격이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쌀 선물거래 재개에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는 쌀에 대한 투기가능성과 가격불안정성 때문이다.

쌀 선물거래 재개에 반대하는 네 번째 이유는 기준가격, 지표가격 제공의 문제 때문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32개 생협으로 구성된 일본생활클럽연합회는 나서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량안정보장의 관점이나 식량자급률 등의 문제가 많으며,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의 약 6,000개 쌀소매점으로 구성된 일본 쌀곡소매상업 조합연합회도 쌀 선물거래가 가격폭등의 가능성도 있어 안정된 가격으로 받아들이기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쌀 선물거래 재개에 반대하는 네 번째 이유로 쌀 거래의 기준가격, 지표가격 제공 문제이다. 농림수산성에서는 현물 가격지표가 없어졌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가격을 형성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선물거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쌀 유통의 자유화가 진행되어 농협의 쌀 집하력은 유통되는 쌀 전체의 절반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농협이 전국쌀곡물거래·가격형성센터(쌀가격센터)에 쌀을 상장시켜 가격을 형성해 온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자유화 이후 거래량이 급속히 위축되어 쌀가격센터는 지난 3월에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가격지표를 잃게 되어, 현재 쌀 거래의 대부분이 집하업자와 도매업자의 상대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자의 자진신고에 의한 가격지표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객관적인 지표가격이 필요하다.

올해는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의 오염으로 쌀 유통이 금지되었고, 니가타(新潟)현과 후쿠시마(福島)현의 홍수피해로 쌀이 부족할 경우 쌀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선물시장의 조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JA 등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현물거래가 10% 미만인 투기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일반 현물시장의 지표가격으로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JA는 “먼저 현물시장에서 객관적 지표가격을 형성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 밖에 쌀 선물거래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의 하나로 선물시장을 활성화하여 자포니카쌀의 지표가격을 만들어 수출입 기준으로 이용하는 이점이 있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주간 이코노미스트 9.27일자, 지토 노부유키(茅野信行) 교수).

“양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품종은 일본에서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는 자포니카 쌀로서, 이 품종의 가격을 일본에서 알리는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세계에는 대표적으로 인디카 쌀과 자포니카 쌀 2가지 품종이 있다. 세계 쌀 생산량 4억 5,000만 톤 중 86%는 인디카 쌀, 14%는 자포니카 쌀이 차지하고 있다.

인디카 쌀은 이미 선물시장이 있어 가격지표가 존재한다. 자포니카 쌀은 지금까지 지표가 없었다. 자포니카 쌀은 맛이 좋고 중국처럼 자국에서 생산하려는 나라가 많아졌다. 선물시장을 정비하는 것은 자포니카 쌀의 수출입 가격결정권을 일본이 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본의 농가를 지키는 일일 것이다.”

** 일본관, 주간 이코노미스트, 9.27일, 지토 노부유키 (茅野信行) Kokugakuin University 경제학부 교수.

표 1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에 대한 찬반 견해

	찬성 견해 (농림수산성, 민주당, 선물거래소)	반대 견해 (JA그룹, 자민당)
생산조정유도 정책과 정합성	2008년 쌀 생산조정정책이 변경되어 ‘호별소득보상제도(戸別所得補償制度)’를 도입함으로써 쌀 정책기조가 “가격정책에서 소득정책으로” 전환, 쌀농가의 생산조정 참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는 선택제로 전환되어, 2005년 불인가 상황과 다름.	호별보상은, 소득정책이지만 생산조정인 생산수량의 목표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생산유도 수단으로 2005년과 근본적 차이 없음.
가격변동리스크 경감	농업자들에게 쌀 가격변동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선물거래 활용 가능(가격 헤지). 선물시장은 생산자에게 가격변동의 위험성을 경감	선물거래로 가격헤지(hedge)가 가능하다면, 생산수량목표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호별보상제도 가입 필요 없음. 호별보상에 따른 소득헤지가 있는데, 선물거래에 따른 가격헤지 구조를 이중으로 실시하는 것은 제도 모순
가격안정성과 투기성	투기자금에 따른 과도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장과 국가가, 한 사람 당 거래수량 및 시세 폭을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주식인 쌀의 투기대상화로 쌀시세의 급격한 변동 초래, 선물거래의 투기적 성격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않아, 쌀 생산현장과 유통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거래가격기준	쌀 거래의 객관적 지표가격이 존재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선물시장은 생산자에 거래기준이 되는 가격을 제공	-
그 외 논점	재해지역 복구는 중요과제이나, 쌀 선물 시험상장에 대한 가부는 법률의 인가기준을 만족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의 자유재량이 아님.	대지진피해와 원전사고로 불안해 하는 농업종사자 미고려. 동일본대지진 피해복구가 최우선

3.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 이후 과정과 전망

이상과 같은 찬반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농림수산성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장관의 인가 발표 기자회견과 함께 7월 1일에 동경 곡물상품거래소와 관서 상품거래소가 신청한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을 인가하였다. 쌀 시험상장에 반대해 온 JA 그룹은 쌀 선물거래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데 이어 항의의 뜻을 표명하

7월 1일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의 인가로 동경·관서상품거래소는 8월 8일 선물거래를 시작하였다.

였으며 야당도 일제히 비판하였다.

양 거래소는 8월 8일 선물거래를 시작하였다. 시험상장은 2년간 시행되어, 2년 후에는 상장, 시험상장의 재신청, 폐지 중 하나로 결정된다. 인가기준은 (1) 충분한 거래량을 예상할 수 있는가?, (2) 생산·유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가? 등 2항목으로, 시험상장은 신청을 받은 국가가 기준에 못 미치는 근거를 밝히지 않는 한 인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장을 신청한 거래소가 인가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JA그룹이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에 필요한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대두, 밀 등이 시험상장을 할 수 있었으나, 상장까지는 못하고 폐지되었다.

동경 곡물거래소에서는 관동(이바라키(茨城)현, 도치기(栃木)현, 지바(千葉)현)산의 고시히카리를 표준품목으로 지정하여 6개월 후까지 매달 6개의 미래 결제달을 세운다. 60kg(1건)당 10엔 간격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거래단위는 100건부터이며, 담보금은 1매(매는 최저거래단위) 당 6만 엔이다. 담보금 등은 시장의 거래 상태를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해 갈 의향이다.

8월 8일 거래 개시 직후, 관동산 고시히카리에 대한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을 사전에 정한 기준치 (60kg=13,500엔)를 큰 폭으로 상회하였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가 발동되었으며, 이날 판매도 성립하지 않았다.*** 매수주문이 많았던 이유는 수해로 인해 작황 악화,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능 오염으로 공급이 부족해 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양 거래소가 당초 계획했던 1일평균 판매고인 5,000매는 달성하지 못하고 수 백매에 그치는 날이 많았다.

9월 29일에는 이시카와(石川: 석천)현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 의결을 통해 쌀 선물거래의 본상장 불인가와 시험상장 즉시 폐지를 국가에 요구하는 쌀 선물거래에 관한 의견서를 전국 도도부현 의회 의장회의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8월 8일 시험상장이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의견서는 투기로 인해 쌀 값 등락이 심해져 농사의 생산현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주식인 쌀의 안정공급을 해

***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전기회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듯,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한다.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지난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30분 경과 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네이버 백과사전)

치게 되며, 극단적인 소비축 주도로 가격이 형성되고 과도한 쌀값 하락이 고정화됨으로써 생산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일본 농업신문, 9.30일자).

10월 20일 현재를 기준으로 시험상장 이후 양 상품거래소에서 쌀 선물거래가 저조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10월 들어 동경 곡물상품거래소에서는 하루 거래량(出來高)이 300~500매(1매 100건, 건당 60kg)가 거래되어 당초 목표인 15,000매를 하회하고 있다. 이는 금(金) 선물상장과 증권시장이 저조하고 투자마인드가 얼어붙어 투자주문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일본농업신문 11.20일자).

향후 일본의 쌀 선물거래는 2년간의 시험상장이 진행될 것이다. 시험상장 후 3개월도 안되는데 일본이 원전사고 이후 정책이나 사회경제가 정상을 되찾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JA 협동조합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선물거래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거래 목표인 1일 15,000매 이상을 거래하기가 수월치 않고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동경과 관서 상품거래소에서는 쌀 이외 밀, 콩 등 선물거래 경험에 있고 시행착오를 거친다면 우려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기 때문에 2년 후의 본상장 여부를 속단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쌀 선물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쌀에 관련한 일본의 선물거래가격이 적어도 세계의 자포니카 거래가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거래방식으로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20일 현재를 기준으로 시험상장 이후 동경·관서 상품거래소에서 쌀 선물거래가 저조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표 2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 개요

거래소	동경 곡물상품거래소	관서 상품거래소
거래대상 (표준품)	간토(関東) 고시히카리(이바라기(茨城), 도치기(栃木), 지바(千葉))	호쿠리쿠(北陸) 고시히카리 (이시카와(石川), 후쿠이(福井))
현물결정 수수대상 상품명(공용품)	니가타(新潟)현산 '고시히카리', 이와테(岩手)현산 '히토메보레', 아키타(秋田)현산 '아키타코모치' 등 19개	이바라기(茨城)현산 '고시히카리', 도야마(富山)현산 '고시히카리', 시마네(島根)현산 '고시히카리' 등 18개 이상

참고문헌

주간 이코노미스트(일본판), 아야 신행 동경대 교수 기고문, “선물시장의 창설로 일본산 쌀 가격을 세계에 발신”, 2011.9.29.

일본농업신문 기사, 2011년 6.25일자, 6.27일자, 6.28일자, 7.2일자, 8.5일자, 8.6일자, 8.9일자, 9.30일, 11월 20일자 기사, 기고, 특집